

## 북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한별이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hanbyul@kdi.re.kr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동 속에서 성사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둡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어 오던 상황이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자료는 북한의 2018년 신년사에서부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했던 주요 회담 및 발표 현황과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여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주요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중요 발표와 상호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성과를 정리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의제별로 어떠한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이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본 자료는 한국의 청와대와 통일부,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보도자료에 주로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보조적으로 언론 기사를 참조하였다.

## I. 주요 회담 및 발표

〈표 1〉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이루어졌던 주요 회담 및 발표들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한국 정부와 관계된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신년사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오던 북한이 입장을 선화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최근 한반도 상황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차관급접촉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1월 9일)으로 재개되었고,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를 위해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인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북미대화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2월 25일).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3월 5~6일)을 통해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었고, 방북 결과 브리핑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었다(3월 8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졌다.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로 양국이 갈등을 겪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무산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5월 24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사를 재확인하며 이들 만에 공식적으로 재추진되었다. 이후 비핵화 등 의제조율을 위해 판문점에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시작되었고(5월 27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총 7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사상 첫 정상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단독 정상회담과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업무오찬, 공동합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1> 북미정상회담 관련 주요 회담 및 발표

월	남·북	북한	미국	한·미
1		(1일) 신년사: 남북관계개선 필요성 제기,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 제의		
		(9일) 남북고위급회담: 2015년 12월 이후 25개월만에 남북대화 재개		
2		(10일) 북미회담 불발: 당일 북한의 취소 통보로 평창 올림픽 북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 펜스 부통령의 회담 무산		
		(25~27일)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 단장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북미대화 용의 표명		
3		(5~6일)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8~9일) 특사단 방북 결과 워싱턴 발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북미대화 용의 전달	
		(8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회담 제의 수락		
		(25~28일) 김정은 위원장 1차 방중 (31~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1차 방북: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목적		
4		(10일)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북미대화 언급	(9일)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 각료회의에서 정상회담 일정 발표	
		(27일) 남북정상회담		
5		(7~8일)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		
		(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차 방북: 정상회담 일시, 장소 및 의제 조율, 미국인 억류자 3인 석방, 북한 매체 북미 정상회담 첫 언급		
		(10일)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발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미국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할 경우 회담 재고려	(13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인터뷰: PVID 이행 언급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펜스 부통령 인터뷰를 거론하며 지도부에 정상회담 재고려를 제기할 것이라 업포	(22일) 펜스 부통령 인터뷰: 북한,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언급	
		(25일) 북한, 김계관 담화 통해 대화 지속 메시지 전달	(24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 외무성 관리들의 강경 비난을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6		(27일)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착수: 판문점에서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 조율		
		(31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회담		
		(1일) 트럼프-김영철 면담,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주: 일자는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일지」(2018년 1월~5월);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dprkchron>, 접속일: 2018. 6. 20)

## II. 의제별 주요 일지

### 1. 비핵화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가장 많은 논의가 오고간 핵심 사안이다(표 2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북미대화의 전제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 기회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였다(2월 25일).<sup>1)</sup> 대통령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확인하여 미국에 전달하였고(3월 8일), 이어 폼페이오 당시 미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을 목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3월 31일~4월 1일).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의 강도 높은 비핵화 방안에 북한이 반발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상황으로까지 심화되기도 하였다. 미국이 일관되게 제시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였으나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구체적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원칙이 기술되었다.

<표 2>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일지

회담 및 발표	비핵화 관련 내용
남북 신년사 (1.1, 1.10)	<p>(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핵개발 완성의 의미와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강조, 핵 선제 불사용·불위협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li> <li>-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li> <li>-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li> </ul> <p>(한국)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li> <li>-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li> </ul>
평창올림픽 북대표단 방남 (2.25~27)	<p>(남북)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재인 대통령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비핵화 문제 직접 언급</li> </ul> <p>(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하길 원한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악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li> </ul> <p>(북한) 외무성 대변인 문답을 통해 미국의 전제조건적 대화에 반발</p>

1) 『중앙일보』, 「문 대통령, 김영철과 회동서 ‘비핵화’ 직접 언급」, 2018. 2. 26.

<p>대통령 특별사절단 방북 (3.5~6)</p>	<p>(한국)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을 특사단의 방북 목표로 밝힘 특사단은 귀국 후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확인하였다고 발표 -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p>
<p>김정은 위원장 1차 방중 (3.25~28)</p>	<p>(북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 언급 -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p>
<p>폼페이오 장관 1차 방북 (3.31~4.1)</p>	<p>(미국)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힘<sup>2)</sup></p>
<p>남북정상회담 (4.27)</p>	<p>(남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을 판문점 선언 3-(4)에 명시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p>
<p>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 (5.7~8)</p>	<p>(북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 재언급 - “조(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치를 하며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 (중국)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내세운 ‘단계적’ 표현 전달<sup>3)</sup> - “단계적 행동을 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p>
<p>폼페이오 장관 2차 방북 (5.9~10)</p>	<p>(미국) 폼페이오 장관, 방북길에서 비핵화 과정을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불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금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논의하게 될 사항은 “부분적으로 북한도 합의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다”고 밝힘 폼페이오 장관,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양국이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결과 발표 (북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sup>4)</sup></p>
<p>한미 외교장관 회담 (5.11)</p>	<p>(한미)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구적이고(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양국이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고 발표</p>
<p>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공방 (5.4~5.23)</p>	<p>(미국) 불탄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 확인 -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실현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는 “모든 핵무기를 제거·폐기하고,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뜻하며 북한에 어떠한 혜택이 흘러들기 전에 PVID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힘<sup>5)</sup>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불탄 등이 언급한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한다고 비난 (미국) 백악관 대변인,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리비아식 모델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식 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p>
<p>폼페이오 장관</p>	<p>(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변화 시사 - “일괄 타결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물리적 이유가 있다” - “물리적 이유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괄 타결일 것” (미국) 폼페이오 장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신속한 비핵화’, 곧 시간을 두고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힘</p>
<p>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5.24)</p>	<p>(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국제 기자단에 공개, 핵무기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핵실험장 완전 폐기로 평화애호 노력이 입증되었음을 선언</p>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5.31~6.2)	(미국)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목표는 일관되게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재확인
북미정상회담 (6.12)	(북미) 공동 합의문 3항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언급 -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자료: 청와대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c/briefings>, 접속일: 2018. 6. 20); 백악관 브리핑(<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 접속일: 2018. 6. 20)

## 2. 체제보장

북한은 미국의 핵 전쟁 위협과 제재 압력에 대한 방어적 대응 조치로써 핵을 개발했다<sup>6)</sup>는 주장을 펴 왔으며, 대북특사단의 발표를 통해 체제안전 보장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였다(3월 6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합의되었고(4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종전 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해 체제안전 보장의 확신을 주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중요 변수이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sup>7)</sup> 북미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5월 22일).<sup>8)</sup> 체제보장 관련 논의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1, 2항에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반영되었다(표 3 참조).

## 3.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을 대북제재와 압력이 유효했던 결과로 보고,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와 뜻을

2)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4-29-18: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2018. 4. 29.

3) 『동아일보』, 「시진핑, 트럼프에 '김정은의 단계적 조치' 지지 표명」, 2018. 5. 10.

4) 『서울신문』,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귀뜸한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은?」, 2018. 5. 10.

5)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4-29-18: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2018. 4. 29.

6) 북한 외무성 핵실험 발표 성명(2006.10.3)

7) 국무부, 'Interview with Chris Wallace of Fox News Sunday'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8/05/282048.htm>, 검색일: 2018. 6. 22).

8) 청와대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결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3〉 북한 체제보장 관련 주요 일지

회담 및 발표	체제보장 관련 내용
대북특사 방북 결과 발표 (3.6)	(남북) 특사단이 발표한 북한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내세움
남북정상회담 (4.27)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 합의사항을 판문점 선언 3-(3)에 명시 -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감 표명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 5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폼페이오 장관 인터뷰 (5.13)	(미국) 폼페이오 장관,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과거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 정권에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함으로써 25년 동안 계류된 비핵화 이행과의 거리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한미정상회담 (5.22)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트럼프-김영철 면담 (6.1)	(미국)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발표
북미정상회담 (6.12)	(북미) 공동 합의문 1항과 2항에서 각각 양국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언급 - “미북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 “미북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자료: 청와대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c/briefings>, 접속일: 2018.6.20.);

美 국무부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index.htm>, 접속일: 2018.6.20.)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여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여 북한의 전력·인프라·농업 부문의 발전을 돕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5월 13일).<sup>9)</sup>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6월 1일).<sup>10)</sup>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직접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표 4 참조).

9) 5.13 ‘Fox News Sunday’ 인터뷰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8/05/282048.htm>)

10)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 이후 기자회견(2018. 6. 1).

<표 4>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관련 주요 일지

회담 및 발표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관련 내용
남북 신년사 (1.1, 1.10)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남북대화 용의를 표명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커다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트윗을 올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갈 것이며 독자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힘
美, 추가 대북 제재 조치 발표 (2.23)	(미국) 미 재무부, 북한의 해상무역 봉쇄를 겨냥해 총 56개의 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의 제재 발표 - 제재 대상에는 북한이 해외 유류 밀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들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 3국 선박과 기업들도 포함됨
대북특사 워싱턴 브리핑 (3.8)	(미국) 백악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하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모든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4.20)	(북한)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
남북정상회담 (4.27)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을 판문점 선언 1-(6)에 명시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 (5.7~8)	(미중)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한미 외교장관 회담 (5.11)	(미국) 폼페이오 장관, “김 위원장이 옳은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과 북한 주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이며,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 (한국) 강경화 장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며, 현 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폼페이오 장관 인터뷰 (5.13)	(미국)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언급 - 미 국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 자본이 들어가 북한의 수요가 높은 전력망 확충과 인프라 개발, 농업기술 지원 등을 도울 수 있을 것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5.31)	(북러)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언급
트럼프-김영철 면담 (6.1)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면담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북미정상회담 (6.12)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비핵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일지」(2018년 1월); 백악관 브리핑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 접속일: 2018. 6. 20);  
美 국무부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 접속일: 2018. 6. 20)



## 참고문헌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8년 1월~5월)

『동아일보』, 「시진핑, 트럼프에 ‘김정은의 단계적 조치’ 지지 표명」, 2018. 5. 10.

『서울신문』,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귀뜸한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은?」, 2018. 5. 10.

『중앙일보』, 「문 대통령, 김영철과 회동서 ‘비핵화’ 직접 언급」, 2018. 2. 26.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4-29-18: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Rep. Adam Schiff」, 2018. 4. 29.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5-13-18: President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2018. 5. 13.

〈웹사이트〉

청와대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c/briefings>)

백악관 브리핑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

美 국무부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index.htm>)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dprkchron>)